

호청강연자료집 PCSD의 국제, 지역 협력위원회 이기대론에
국제에 대해 국가전략의 수정을 위해
지방자치의 전국화와의 리우+10 준비 > 국제협력은 환경정책의 2부
인제부터 전국화하기 VGO, 1997년 등리해결 준비
2001년 2002년 리우+10 앞둔 준비 → 전국화하기 영향중의
9월의 국제: 유엔의 환경정책의 리우+10
초청강연: 2001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국제의
새로운 지역개발전략
지역개발전략 수정을 위해
리우+10을 위한
리우+10을 위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지방의제 21의 리우+10을 준비하는 지방의제 21

박영숙 PCSD 국제, 지역협력위원회 위원장

1. 들어가는 말

2002년 6월 월드컵을 전후해서 리우+10으로 불리는 세계환경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92년도 지구정상회의 이후 10년간의 지구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추진성과를 종합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채택하도록 되어있다.

리우+10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유엔은 각국에 <국가 준비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의 '리우+10대책추진기본계획안'을 보면 작년 9월에 출범한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국가준비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산하에 다양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그 운영 및 추진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PCSD는 국제지역협력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대책반들이 작성하는 국내대책추진방향이나 환경외교기본전략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 리우+10을 준비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우선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92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 사회, 환경부문 등에서의 지속가능발전추진성과평가보고서를 3월말 예정으로 작성 중에 있으며 국내대책으로 리우+10을 기해 지속가능발전개념의 정책적용확대와 획기적인 인식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싹트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개념이란 경제적 활력, 환경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호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체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현재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까지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PCSD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리우+10을 위한
환경정책
리우+10을 위한
지속가능

환경정책
리우+10을 위한
지속가능
리우+10을 위한
지속가능
리우+10을 위한
지속가능

가속성장
고용, 생산성, 임금, 저축, 이윤, 정보, 지식과 교육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오염, 폐기물, 빈곤 등을 감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하는 것이 통합 접근의 방법이라고 본다. ^{부속 4쪽}

1996년도에 수립된 우리 나라의 국가의제21에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으로서의 정책들은 70~80년대의 성장위주의 기존정책과 하등 다를 바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9쪽} 중앙정부의 개발과 관련된 경제부처의 지속가능발전개념에 대한 인식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서서히 확산단계에 접어든 것은 다행이다. ^{22~24쪽}

^{25쪽}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제21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있는 영국 맨체스터의 '94 지구포럼'에 참가했던 우리 나라 몇몇 기관들이 공동으로 1994년 9월에 개최한 '지방의제21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워크숍'이 계기가 되어 ^{26쪽}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의제21 수립작업이 시작되었다. ^{27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나라에는 절대 다수의 지방자치체가 지방의제21을 이미 수립완료 또는 수립 중에 있으며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전국적인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30쪽}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의제21이 국가의제21보다 앞서 수립되었으며 후발지방정부의 의제21이 선발자치체의 모델을 참고한 관계로 국가의제21과 지방의제21의 연계성이 불분명하다. ^{31~32쪽} 국가의제21의 실천주체들인 지방의제21과의 유기적인 연계구축 없이 어떻게 중앙정부가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연차 국가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며 금번 리우+10에 제출할 의제21 이행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33쪽}

리우+10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여유가 있다. ^{34쪽}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그 준비를 의제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시의 적절하다. ^{35~36쪽}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준비위원회 및 민간준비기구와 협력한다면 금번 세계환경정상회의를 통해 지구환경, 국가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통합적으로 이루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37쪽}

II. 우리 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이란 1996년 10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제출한바 있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제21>국가실천계획'에 담겨진 정책들이다. 이것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약점은 유엔의제21이 권고하고 있는 실천주체인 민간부문의 참여 없이 정부주도로 만들어져서 의제21의 정신에 어긋나 있다는데 있으며 개개 관련부처가 각기 기존의 정책들을 (무성의하게?) 제출한 보고내용을 단순히 취합해낸 문건으로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나 체제의 부실함이 지나치다는 평가이다. 그런 현상은 우리 정부가 해마다 UNCSD에 제출하고 있는 연차국가보고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2001년 환경지속성지수(ESI) 보고에서 우리 나라가 122개 국가 중 95위라는 데서 언론에서는 경제는 상위인데 환경은 95위라고 꼬집은 바 있다. 그 당시 환경부의 해명자료에서 보면 금번 ESI는 90~96년 통계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어쨌거나 평가단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자료들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제출자료들이 그런 상태이고 보면 그런 평가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기구들이 분담해서 작업하게 될 전략수정작업의 가이드라인을 국제지역협력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

수정기본원칙으로 이 지침서는 ①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져야 ②각 정부부처 정책이 지속가능발전개념하에 지속가능발전정책으로 입안·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③지구환경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국가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리우+5에서 채택한 개정의제21, OECD지속가능발전보고서 등의 현실변화를 고려하고 ④2002년 리우+10 국가보고서와 연계하여 개정하

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개정원칙으로는 ①정부, 기업, 민간의 참여로 개정하여 그들이 작성 주체 및 이행주체가 되도록 한다. ②각부처 정책을 망라한 지속가능한 국가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 ③부처별·정책분야별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수립 ④지역단위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의 제21과** 연계하여 수립 ⑤각 장별 나열보다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개정 ⑥부처정책, 재정계획, 이행시간표, 제도정비 등 이행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⑦실행가능한 단계별 과제를 포함하여 **실천계획으로** 수립 ⑧모든 국민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생활지침서의 역할을 하도록 ⑨생산복지, 삶의 질 개선, 지식기반사회 등 국가의 추진시책과 연결 ⑩각 부처 정책(특히 경제정책)과 통합시켜 가는 과정 및 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들고 있다.

수정작업에 참고하게 될 2001년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OECD 정책 제안에는 ①지속가능한 시장기능의 강화 ②의사결정강화(정부가 선도적으로 정책통합개선, 범정부적 접근방식,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쉽 등) ③과학기술의 육성강화 ④세계경제와의 연계 ⑤기후변화에의 대응 ⑥천연자원의 관리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금번 추진중인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개정은 각 부처의 개별 기존정책의 취합이 아닌 **지속가능발전개념이 적용된 통합전략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제21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전략의 성과는 각 지역사회의 실천결과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국가전략과 지방의제21의 연계를 위해 지방의제21의 수정작업도 함께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PCSD의 국제지역협력위원회에서 3월 중순 경 공개적인 장을 마련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개정작업을 위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며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연계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환경부가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실천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제시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그 내용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지속가능발전평가지표' 개발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것을 비롯, 지방의제21의 이행성과평가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

태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 동안의 지방의제21의 부분적인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 앞으로 계속 보완작업이 요구되지만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지표'가 만들어져서 서울의제2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모델은 타 자치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Partnership, etc. 모델이 3636으로 242

금번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정작업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관련개념으로만 인식해온 종래의 오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 이상의 큰 소득은 없을 것이다.

Partnership의 틀에서

III. 국가전략과 지방의제21의 관계

국가전략이 완벽해도 지역사회와 개개인의 실천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인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은 물론 현세대인의 환경의 쾌적함도 성취해 낼 수 없다. 내 고장을 녹색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사회구성원들간의 약정서인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통로이며 새로운 방향이다. 국제적인 추세로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경향도 이러한 요인이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기관 → 시민사회
민간기업 → 사회적기업
정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주민

지방의제21추진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지방의제21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에도 있지만 지방의제21이 정부부처 또는 부서의 정책과 무관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물질약정책, 산자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이 각 실천주체의 행동네트워크인 의제21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마저 의제21관련부서는 타부서와는 무관하게 UNCSD의 대응창구역할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지난 9월에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로 대통령직속지속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지속가능발전전략인 의제21의 정신이 범부처에 인식되

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12개 부처장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6년간의 지방의제21 수립과정에서 의제21이 중시하고 있는 파트너십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PCSD의 부처장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겨우 2회 열린 터라 아직 가늠하기 힘들지만 이보다 먼저 CSD기능을 조례로서 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서 보면 부서간의 통합정책의 중요성 및 지속가능발전개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기대를 가져본다. 그리고 개발부서에서도 자문기구운영 식의 요식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방의제21 수립과정에서 얻어진 귀중한 부산물이다. PCSD의 기능으로 중앙부처간에 같은 성과가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국가전략과 지방의제21의 연계와 부서간의 통합정책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제는 지방정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구 설치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그 기능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에 그 기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PCSD는 국제·지역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CSD 구성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사회,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정부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저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행정형태이다. 그것은 선진사회의 행정형태가 government에서 governance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그러한 행정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전략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단체를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전략에는 민간단체지원대책마련,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인 지방의제21과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지방의제21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IV. 세계환경정상회의(Rio+10)

'92 리우지구정상회의에 이어 '94 맨체스터 지구환경포럼이 '97년도에는 브라질에서의 예비회의를 거친 후 뉴욕본부에서 유엔환경특별총회(Rio+5)가 열렸고 금년 6월 세계의 6억의 인구가 열광하는 월드컵 경기를 전후해서 세계환경정상회의(Rio+10)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유엔환경개발회의('92 리우) 10주년 그리고 유엔환경특별총회('97 뉴욕) 5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의 경제, 사회질서를 환경가치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는 유엔회원국 189개 국가로부터 정상급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대표, 국제기구대표, NGO 대표 등 2만 여명의 참석을 전망하고 있다.

이 회의의 준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① 제1차 준비회의가 2001년 4.30~5.2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며 준비회의 일정 및 의제 내용이 협의되고 국가 및 지역차원의 준비현황이 검토된다.

② 2001년 말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제56차 유엔총회에서는 리우+10의 준비현황이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보고된다.

③ 제2차 준비회의는 2002년 1.28~2.8까지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국가 및 지역차원의 추진결과를 검토하고 주요그룹 (major group)의 참여방안 검토 및 저명인사 라운드테이블 토론안을 검토한다.

④ 2002년 3.18~29일 또는 4월1일~19일까지 뉴욕에서의 제3차 준비회의에서는 Rio+10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낼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채택

한다.

⑤ 2002년 5월6일~1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될 제4차 준비회의는 각료급회의로 구체적이며 정치적인 의지가 담긴 Rio+10 결의문안을 논의·채택한다.

빈곤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금번 세계환경정상회의는 지난 제8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환경장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그 회의개최국으로서의 적합성으로 '한국은 절대빈곤과 저개발로부터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성공하고 개발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와 민간단체에서는 그 회의 유치로 국내의 새로운 환경과 라다임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환영하였지만 월드컵의 주최국으로서 같은 시기에 두 대형행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외통부의 견해가 피력되면서 남아공이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유엔의 권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회의에 대비해서 우리는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연계를 가지면서 주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준비과정에서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종래와 같이 정부 독단 아니면 학계의 전문가 위주의 민간참여에 한할 것이 아니라 문호를 개방해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정부차원의 준비에 참여하게 하고 회의참가대표단 구성에도 민간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92년 리우회의이래 공식화되어 권장되고 있는 NGO의 참여추세에 맞추어 금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NGO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초기부터 공동으로 회의대비에 임해야 한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 NGO환경단체들에게 제의하는 것은 정부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간독자적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내야 한다.

V. 한국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와 Rio+10 준비

2019년

중앙정부와 민간단체의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졌던 '92 리우지구정상회의에 비해 리우+10에서는 지방의제21과 관련있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 Initiatives)가 이 부분의 일을 담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기구는 세계의 지방의제21 추진 지방정부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현재 64개 국가에서 3000여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등 몇 지자체들이 가담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본부에 소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입 지자체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최근 한국본부가 설치되었다. 그 기능은 현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재단은 행정자치부산하기구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행자부가 지방의제21과 관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방의 환경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단하게 한다.

리우+10 회의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지방의제전국협의회가 금번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은 국가준비위원회와 민간단체준비위원회와 나란히 독자적인 준비위원회의 구성이다.

그 준비위원회가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은 준비위원회가 마련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정작업과 그 동안의 이행성과평가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일.

② 유엔이 회의준비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각종 회의는 물론 ICLEI가 준비중에 있는 권역별회의(예 : 아태지역시장환경회의 2001년 5월 4일~6일까지 호놀룰루에서 개최예정)를 비롯한 지방정부회의 참여.

③ 주변국가와의 쌍방 또는 다자간의 연대회의(예 : 한일, 한중, 또는 한일중등) 등을 통해 지역환경점검 및 대국제지역대응전략모색.(예 : 서울시주최, 지방의제21 국제세미나, 2001년 10월 25일~27일, 한·중·일을 포함하는 13개국 100여단체 총 150명 예정)

④ 회의 참가예정자 선발 및 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회의참가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 참가하는데 의의에서 회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⑤ 리우+10 준비회의에는 동일인을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참여시켜 회의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여 회의에 주체적인 참여가 되도록 하는 대책 수립.

⑥ '92 지구정상회의에서 누락된 (NGO의의제21, 세계여성환경기구(WEDO)의 의제21참조)의제 또는 10년간의 상황변화로 비롯되는 새로운 의제 개발.

⑦ 우리나라 독자적인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준비.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른 환경문제논의 위한 것(예 :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존 문제, 대만의 핵폐기물 반출 문제, 국제적으로 특수위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할에 관한 일 등).

⑧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 지구환경을 위한 실천모델 개발.

⑨ 우리나라 지방의제21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전시장(booth) 준비.

⑩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개념 확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준비내용을 여타 준비위원회들과 협의하거나 독자적인 작업으로 구체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떠한 준거들과 기준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5일~16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바있는 '한·일 지방의제21워크숍'에서의 기조연설에서 김귀곤교수는 '의제21과 리우협약들의 이행을 검토하고 미래의 새로운 전략과 메카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준거들과 기준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접근방법에 너무 편도되어 왔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행전략과 메카니즘은 동양적 철학과 가치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 라고 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 맺는말

금년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다. 30여년만의 폭설이라고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는 한파·홍수의 피해를 겪는가 하면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남긴 재난이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심상치 않은 미래를 진단한다.

생존에 화급한 경제위기극복의 과제 앞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로 간주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은 뒷전에 밀리기 일수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구 시민 개개인에게 실천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우리도 이 대열에 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라는 금번 리우+10회의에서는 지난 리우+5회의에서처럼 실천이 없는 데서 지구환경개선의 성취가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정치적선언도 합의해내지 못한 우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적어도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현황제시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구성이 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리우+10준비위원회가 내용을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추진에 있어서 그래도 기대를 가질수 있는 것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회의 활약에서 찾을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리우+10회의의 준비과정과 회의참여를 통해 향후 10년에 크게 기여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제발들어서 보듯이